

“형 돌아와” 광주 도서관 붕괴 참사 49일 노동자 추모제

숨진 노동자들 기리며 진상 규명과 건설현장 안전시스템 정비 촉구

4명의 노동자가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49일을 맞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2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참사 49일 노동자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사회단체, 노동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묵념, 추모의식, 진혼무, 유가족 발언,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먼저 지난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추모사를 들으며 그날의 아픔을 떠올리는 듯 긴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바라만 바라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숨진 노동자들을 기리며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故) 서정운 씨의 동생 고석환 씨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말뿐이다. 저희 형이 왜 죽었는지, 앞으로 유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지는 건지 제발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관계 기관은 말로만 진상 규명을 언급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4명의 노동자가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참사 49일을 맞아 2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현장에서 ‘참사 49일 노동자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뉴스시스

남편을 그리워하며 담았던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고(故) 서정운 씨의 아내 안점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가 꿈이길 바라고 있다. 아직도 부르짖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다. 너무 허망하게 가버렸다. 환하게 웃고 힘차게 일하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며 견디겠다”고 울먹였다.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은 추모사

를 통해 “전통적으로 건설 현장은 시공자가 안전하게 시공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등 모든 주체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시스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유가족 지원을 위한 광주시 대책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사고 발생 49일이 지난

오늘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 유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오권철 기자

광주시, 노로바이러스 유행... 영유아 각별 주의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4주간 검출률 50% 이상 지속 증가세

광주시가 최근 겨울철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10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설사 환자 대상 원인병원체 모니터링 결과, 12월 넷째 주부터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급증해 1월 셋째 주 58.5%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12월 셋째 주 31.3%에서 12월 넷째 주 53.7%, 1월 첫째 주 54.3%, 1월 셋째 주 58.5%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4주간(12월 넷째 주~1월 셋째 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78.3%(157건 중 123건)가 0~6

세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층에 유행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겨울철 낮은 온도에도 생존하며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 재감염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채소류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또는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이다.

감염된 경우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5일 이내 회복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탈수증상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민규 기자

통합 전 마지막 채용된 유·초등교사... 광주·전남 232명

광주 43명·전남 189명 합계... 내년부터 통합 채용할 듯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28일 2026학년도 공립 유·초등교사 최종 합격자 232명(광주 43명·전남 189명)을 누리집과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행정통합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광주·전남 전체가 근무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 이번 합격자들이 사실상 마지막 광주·전남 분리 근무 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분야에 332명이 지원했으며, 유치원교사 6명, 초등교사 29명, 유치원특수교사 3명, 초등특수교사 5명 등 43명을 선발했다.

합격자 성별로는 여성이 37명(86%), 남성이 6명(14%)이고, 연령별로는 20대 39

명(90.7%), 30대 3명(7%), 40대 1명(2.3%)이다.

전남은 778명이 지원해 유치원교사 55명, 초등교사 122명, 유치원특수교사 2명, 초등특수교사 10명 등 189명을 선발했다. 이 중 초등 다문화인재전형에 2명이 합격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145명(77%), 남성이 44명(23%)이다. 합격자는 2월 중 임용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고, 신규 교사 임용후보자 연수에도 참여해야 한다.

광주·전남 교육자치 통합으로 7월 가칭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하면 내년부터는 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임용시험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송현근 기자

‘5·18 왜곡 도서’ 지만원, 유족·유공자들에게 배상 판결 확정

지씨, 2심 패소에 상고 이후 ‘상고이유서 부제출’

허위주장 도서에 9000만원 상당 배상 책임 확정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논란이 제기된 책을 썼던 지만원(83)씨가 5·18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3일 5·18기념재단, 5·18 3대 단체(유족회·공모자회·부상자회), 유공자, 유족 등 12인이 지씨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2심에서 패소한 지씨 측이 정해진 시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다 제출 못 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씨는 자신의 저서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5·18유공자 및 유족, 단체들에게 총 9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와 지연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0년 6월 ‘복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펴냈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썼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기술해 논란이 됐다.

5·18유공자와 관련 단체 등은 문제의 저서로 항쟁 참여 시민과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씨를 상대로 손

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씨가 저서로 피해를 본 5·18 유공자 4명과 5·18재단 등 4개 유공자 단체에 각기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숨진 원고 유족 3명 몫 지급분까지 합하면 총 9000만원 상당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아울러 문제된 도서의 발행·배포,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하며 지씨가 이를 어길 시 원고 유공자·유족·단체들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물라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씨의 왜곡 도서로 인해 5·18 유공자·단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씨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1심 이후 숨진 원고 1명을 대신해 소송을 이어받은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고

쳐서 정했다.

이처럼 5·18 왜곡·편향 논란을 산 지씨의 책은 현재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씨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5·18영상고발’ 등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를 다수 펴내 각종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5·18 북한군 투입설’은 여러 차례 펼쳐진 공식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2002년부터 “지씨가 웹사이트·호의·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대국민보고서를 발표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뉴스시스

한겨울 바다 빠진 80대 노인,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구했다

한겨울 바다에 빠진 80대 할머니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28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25분께 완도군 금일읍 한 마을 해안도로에서 A(88·)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안도로 일대를 순찰하던 완도경찰서 금일파출소 소속 김성우·김신용 경감은 약 200m 앞에서 A씨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곧장 순찰차를 몰고 현장으로 이동한 이들은 주변을 수색한 끝에 바다에 빠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수심 약 3m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부표를 붙잡은 채 버티고 있었다. 두 경찰관은 순찰차에 비치

된 구명환을 던져 구조를 시도했으나, 고령인 A씨가 스스로 빠져나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김신용 경감이 직접 바다로 뛰어 들어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혔고, 김성우 경감이 선박용 사다리를 이용해 30m 떨어진 부둣가 계단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구조된 A씨는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매를 앓고 있는 A씨는 해변도로를 걷다 가드레일을 넘어 물건을 주우려던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관은 “순찰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할머니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완도/장광식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